

# 현행 규정은 금융회사등이 FATF 지정 위험국가 국적자에 대한 신규 계좌개설을 거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.

- 연합뉴스, 경향신문, 중앙일보, 한겨레 3월 25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-

## 1. 기사내용

- 연합뉴스는 3.25일 「이란인에게 계좌 개설 거부한 새마을금고……인권위 "국적 차별"」 제하의 기사에서
  - “새마을금고 측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‘「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」’에 따라 이란 국적 고객의 신규 계좌 개설은 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.” 고 보도했습니다.
- 경향신문은 3.25일 「‘이란 국적’ 이라고 계좌개설 거부한 새마을금고... 인권위 “차별”」 제하의 기사에서
  - “새마을금고 측은 이란이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업무 규정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로, 해당 국가의 신규 계좌 개설은 ‘거절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.” 라고 보도했습니다.
- 중앙일보는 3.25일 「“성적 좋아도 장학금 못 받아” ... 인권위 “이란인 계좌 개설 거부는 비합리적 차별”」 제하의 기사에서
  - “새마을금고 측은 “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규정상 위험 국가 국적자에게는 신규 계좌 개설을 원칙적으로 거절한다” 고 해명했다.” 라고 보도했습니다.

- 한겨레는 3.25일 「인권위 “이란 국적 이유로 계좌 개설 거부는 차별”」 제하의 기사에서
- “피진정 지점인 송도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이에 대해 “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업무 규정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인 이란 국적자의 신규 계좌 개설은 거래 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”고 답변했다고 한다.” 라고 보도했습니다.

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문

- 「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\*」에 따르면,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가 지정한 위험국가 국적자 등일 경우에는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,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(「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」 제43조제2항, 제72조 제1항제1호 등 관련 법규(3p) 참고).

\* 「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」

- 따라서, 금융회사등은 위험국가 국적자가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경우, **강화된 고객확인**(신원사항 외에 거래목적과 자금출처 등을 추가 확인) 절차를 거치는 등 고객의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한 후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**필요한 조치를 거쳐 계좌개설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**
- 이에 대다수의 시중은행들은 FATF 지정 위험국가 국적의 유학생 등에게도 재학증명서, 장학금 및 연구비 수혜 대상 서류 등을 토대로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 거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향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.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	책임자	서기관	송용민 (02-2100-1730)
		담당자	사무관	김상협 (02-2100-1736)

## 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
**제5조의2(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)**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(注意)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2.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
  - 가. 제1호 각 목의 사항
  - 나.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(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)

## □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

**제43조(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)**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당해 거래고객(대리인,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"실제 소유자" 및 법인·단체 고객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)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·운영하여야 한다.

1.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
  2.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
  3. 제69조 각 호에 따른 FATF지정 위험국가의 국적자(개인,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) 또는 거주자
  4. 금융회사등의 주요 해외지점등 소재 국가의 정부에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우려하여 발표한 금융거래제한 대상자 리스트
  5.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 등
- ②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제1항에 따른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**제69조(정의)** FATF 지정 위험국가란 다음 각호의 리스트에 속한 국가를 말한다.

1. FATF가 성명서(Public Statement) 등을 통해 발표하는 고위험 국가(Higher-risk countries) 리스트
2. FATF가 이행 취약국가(Non-compliance)로 발표한 국가리스트

**제70조(특별 주의의무 등)** ① 금융회사등은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(개인, 법인, 금융회사등)과 거래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
- ② 금융회사등은 FATF 지정 위험 국가의 고객에 대하여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**제71조(거래목적 확인 등)** ① 금융회사등은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명확한 경제적 또는 법적 목적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거래의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조사하여야 한다.

-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.

**제72조(대응조치)** ① 금융회사등은 제69조에 따른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
  2.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의심되는 거래보고 체계 등 강화
- ② (생략)